

■ 금호타이어 노사 정상화 합의 배경·전망

“더 길어지면 공멸” 위기감에 불안한 합의

지역경제 악영향 속 워크아웃 조기졸업 노사 공감

사측 “징계는 그대로” 불씨 여전…한발씩 양보해야

워크아웃 중 파업이라는 조유의 사태를 맞은 금호타이어가 8일만에 노사 합의로 공장 가동이 정상화됐다.

이번 파업으로 매출 손실이 800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노사 모두 “더 길어지면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채권단의 ‘워크아웃 중단’ 압박,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에 따가운 여론도 부담이 됐다.

◇ “더 길어지면 공멸” 위기감=조업 정화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워크아웃 중인 현재 상황에서 노사 대립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데서 출발했다.

특히 ‘연례행사가 돼 버린 파업’과 ‘워크아

웃 중 파업’이라는 조유의 사태는 지역사회에서 비판적인 여론에 직면했고, 사태가 더 길어질 경우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훨씬 크게 됐다.

또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규정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노사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할 것”을 권고하며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협력업체와 광주상공회의소 등 지역 사회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데다, 타이어 공급 부족으로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대표 차종인 스포티지R 생산에 직접

적인 차질을 빚는 등 지역경제에 영향이 현실화하면서 비판여론이 거세졌다.

여기에 강운태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 “최근 자동차산업이 호황기를 맞아 타이어 수요가 많아진 상황에서 공장 가동이 멈추면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겠느냐”며 노사 양측에 한발씩 양보를 당부하면서 협상에 진전이 이뤄진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채권단의 ‘워크아웃 중단’ 압박도 작용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이미 결정(작년 임단협)된 것 가지고 재협상을 없다”며 “조원 가까이 투자해 살 길을 열어놨는데 파업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고 워크아웃 중단을 시사했다.

◇ 갈등 불씨는 여전=이번 합의에 따라 노사 양측은 대회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견해차가 여전해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짙다.

노사간 이견이 첨예한 것은 지난해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 여부다.

노조는 전임 집행부가 체결한 임단협으로 임금이 대폭 상각된데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며 임단협 재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정리하고 대신 임금을 삭감했고 정년퇴직분 만큼 도급화(아웃소싱)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노조의 재교섭 요구를 일축했다.

노사간 법정다툼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낸 ‘생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불법 파업과 관련한 징계 방침도 거두지 않았다.

전대진 생산본부장은 “이번 합의는 사태 마무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며 “노사가 대회를 시작하기로 한 만큼 이런 문제들을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대회를 시작하기로 한 것 외에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박정육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석유화학 임단협 타결

금호석유화학은 임금을 전년 대비 5% 인상 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금호석화는 지난 2년간 임금을 동결해왔다. 금호석화 노사는 경영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해 임금을 전년 대비 5% 인상하는 한편 자녀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등 직원 가족 대상의 복지제도를 일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금호석화 김성제 사장은 “지난 2년간의 임금동결을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은 인상 수준이지만 일련의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 모두가 회사 경영정상화 달성을 최우선 목표임을 재확인하고 서로 협력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육기자 jwpark@kwangju.co.kr



43돌 ‘예비군의 날’

‘제43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이 1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운태 시장과 윤봉근 시의회 의장, 고성군 육군 31사단장을 비롯해 5개 구 방위협의회원 등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자주국방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타임오프 한도 고시 유효”
법원, 민주노총 패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8부(성낙승 부장판사)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근로시간제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근로시간제면제위원회(근면위)는 작년 5월 1일 조합원 50명 미만의 영업장에서 노조 전임자가 연간 1천 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로를 면제받게 하는 등 노조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고,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4일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결과 당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면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저지당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4월 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지 못하면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회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게 한 노조법 부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손학규 본격 표몰이…오차범위 접전 촉각

한나라 분당을 ‘경선’ 결정, 강재섭 카드 내세울 듯

4·27 분당을 재보선에 출마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일 표밭 공략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에 한나라당은 현재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선으로 후보를 선정하기로 해 정운찬 전 총리 카드가 무산되고 강재섭 전 대표가 손 대표의 대항마로 선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분당으로 집 주소를 옮긴 손 대표는 이날부터 바로 출퇴근 길 인사에 나서는 등 유권자 접촉을 강화하며 지지를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민주당은 일단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서 손 대표가 예상보다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해볼 만 하다”며 고무된 분위기이다.

실제 코리아리서치가 지난달 30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손 대표는 한나라당 강 전 대표와 붙었을 경우 44.3%대 42.7%, 정 전 총리가 나을 경우 45.1% 대 42.7%로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은 영남 출신이 60%인 반면 호남 출신이 20%에 불과하며 최근까지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약장후보를 압도한 지역이었다.

이에 손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의 강남’으로 불리는 이 지역의 정서를 파고들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당론인 아파트 리모델

링 활성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서 세부공약 대결보다는 대권주자로서의 비전을 강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분당을 나설 후보를 전략공천이 아닌 여론조사 결선 방식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주가 후보공모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 외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 3일 공천 신청자 전원(6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하기로 했다. 정 전 총리는 후보 공모에 응하지 않은 만큼, 강 전 대표가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종우

참여당 거부… 야권 연합공천 일괄타결 실패

국민참여당의 거부로 4·27 재보선 야권 연합공천 일괄 협상이 실패했다.

지난달 30일 “김해를 경선방식을 위임해달라”며 막판 중재를 시도했던 시민단체 대표단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의 제언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한 반면 참여당은 거부했다’며 “이로써 4·27 재보선의 포괄적 야권연합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단은 특히 “표본추출방식”이라는 문제가 국민적 여망인 야권연합을 파기할 정도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과 함께 깊은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야권연합을 기대한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당의 이와 같은 쟁점을 이유로 전체연합을 거부한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참여당을 비판했다.

이로써 시민단체 중재에 의한 여권연대 일괄 협상은 일단 실패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한나라당과 1대 1 대결구도를 만들기 위해 후보등록일(12~13일) 직전까지 물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당장 민주당이 순천 무공천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민단체 대표단도 김해를 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야권연대 정신이 지켜지기길 촉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참여당은 김해를 경선방식(유권자 현장투표와 여론조사 50%씩 반영) 중 현장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문제를 놓고 ‘무작위 선출(민주당)과 ‘인구비례 선출(참여당)을 각각 주장하면서 맞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光日만평

- 김종우



누구처럼 돌팔매(?) 꿈꿔야 하나?

시설

‘묻지마 투표’ 조장하는 정당 공천

4·27 재·보궐선거가 코 앞인데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후보를 확정하지 않아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유권자에게 선택권을 뺏어놓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겸종합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결국 정당만 보고 찍으라는 ‘묻지마 투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의 능력 공천은 유권자는 물론 매니페스토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후보자 겸종합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후보자들의 조급증을 자극해 불법선거를 조장하는 후유증도 넓게 된다. 환경군수 재선거가 3차례나 치러진 것도 불법선거 탓이 아닌가. 짧은 준비기간 탓에 후보자들의 공약이 급조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기대하기 힘들다.

선거란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묻지마 투표’를 조장한다면 공당으로서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비판 받는 이유다.

화인코리아 회생 방해 대기업 횡포 아닌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항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회생절차를 방해하며 강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나중에 소재한 닭·오리 가공업체인 화인코리아는 대기업인 S그룹이 위장 계열사인 A사를 통해 금융권 채권을 인수한 뒤 공장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실제로 S그룹은 3개 계열사 등을 앞세워 금융기관의 담보채권 70억 원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 11일자로 법원에 제2공장 경매를 신청한 A사의 대표 등은 S그룹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법원과 채권단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화인코리아에 다시 한번 회생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S그룹도 떼여하지 못한 방법으로 강제 인수하려는 것이 A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게 화인코리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기

순천만정원 박람회장 조성공사 첫 삽

순천만 일원에 152만7000m² 규모로 조성되는 정원박람회장은 개회 3개월 전인 2013년 1월까지 해외 전통정원과 국내의 유명작가 및 기업체 등이 참여해 만드는 테마정원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순천시가 주최하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순천만 일원에서 열린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5개종단 “제한없는 대북지원”

근현건설이 무안 남악신도시에 아파트 분양 열풍을 일으키며 베아채 스위트 516세대 경매를 마련했다.

1일 순천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박람회장 내 수목원 및 습지조성공사 착공계를 시에 접수함으로써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대한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공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 외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 3일 공천 신청자 전원(6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하기로 했다. 정 전 총리는 후보 공모에 응하지 않은 만큼, 강 전 대표가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공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 외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 3일 공천 신청자 전원(6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하기로 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은 오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한 없는 대북 인도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은 1일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 지원을 재개한다는 통일부의 발표는 환영할 만하지만 북한의 일반주민에 대한 인도지원도 속개해야 한다는 뜻에서 교계 지도자 500여 명이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규모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
|------------------------|
|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 |
|------------------------|